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법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진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소윤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신고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유)원]

이효린 활동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조은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간사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인권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회원분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4월에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각종 포럼과 세미나,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공익전업 변호사 양성, 각 분야별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성폭력 범죄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성범죄의 수법 또한 교묘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아 익명성을 악용한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들의 추적이 매우 어렵고, 피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지며 피해자는 유포, 재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사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은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관련 법률 제도에 대해, 제3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지원하는 변호사 및 활동가들이 피해자를 대할 때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제4장부터는 수사 단계 지원, 형사공판절차 지원, 민사재판 지원의 단계와 절차, 단계별 고려해야 할 유의 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관련 유관기관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의 제작을 위해 노력해주신 TF팀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지원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분들께 본 매뉴얼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사법 정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서울지방법변호사회장 **김 정 욱**

## CONTENTS

<b>제1장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b>	<b>1</b>
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3
가. 젠더 폭력으로서의 디지털 성범죄	3
나.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와 흐름	4
2.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6
가. 공간적 특성	6
나. 피해의 특성	7
3. 상담과정에서 고려할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	8
가. 피해 재생산	9
나. 불안	9
다. 피해자를 향한 고정관념	10
라.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지기반	11
 <b>제2장 관련 법률 제도의 이해</b>	 <b>13</b>
1. 촬영 및 제작	16
가. 유형 및 사례	16
나. 성인에 대한 촬영	17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촬영(제작)	22
라.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24
2. 유포 협박, 강요	25
가. 유형 및 사례	25
나. 관련 법령	25
다.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26

3. 유포 및 재유포	27
가. 유형 및 사례	27
나. 관련 법령	28
다. 판례	28
라.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30
4. 허위영상물 등	32
가. 유형 및 사례	32
나. 관련 법률	32
5. 소지 등	33
가. 유형 및 사례	33
나. 관련 법령	34
다. 판례	34
6. 성적 괴롭힘	35
가. 유형 및 사례	35
나. 관련 법령	36
다. 판례	36
라.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38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39
가. 유형 및 사례	39
나. 관련 법령	40
8. 2차 가해	47
가. 유형 및 사례	47
나. 관련 법령	47
다.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49
9.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51
가. 유형 및 사례	51
나. 관련 법률	51
다.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52

10. 기타 범죄유형	54
가. 성착취물 제작과정에서 강제추행, 상해 등	54
나. 스토킹	55
다. 불법촬영등을 목적으로 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56
라. 성착취물 제작을 위한 아동·청소년 알선	57
마.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등	57

### 제3장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과 자세 59

1.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61
2. 피해자 지원의 기본	62
가. 상담 및 자문 시 충분한 정보와 선택지 제공	62
나. 형사절차에서의 역할	63
다. 형사재판 이후의 역할	66
3. 상담 유형별 유의점	67
가.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유의할 점	67
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68
다. 성소수자 피해자의 경우	69
라. 이주여성 등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70
4. 지속적인 상담의 필요성 및 치료 안내	71
5. 피해자 지원제도 개괄	72
가. 무료법률지원사업	72
나. 의료비, 주거, 생계비, 학자금 등 범죄피해구조 지원	73

### 제4장 수사단계 지원 77

1. 상담 및 고소장 제출	79
----------------	----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시 유의사항(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	79
나. 증거 확보 -----	80
다. 신뢰관계인 동석 및 진술조력인 제도 -----	82
<b>2. 경찰 수사단계 -----</b>	<b>82</b>
가. 개관 -----	82
나. 고소장 제출 -----	83
다. 수사 입회 -----	84
라.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	88
마. 전문가 의견 요청 -----	89
바. 증거보전 청구의 요청 -----	89
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	90
<b>3.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결정 -----</b>	<b>91</b>
가. 이의신청 -----	91
나. 검사의 재수사요청 -----	91
<b>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b>	<b>93</b>
가. 검찰 항고 -----	93
나. 재정신청 -----	93
다. 즉시항고 -----	94
라. 헌법소원 -----	95
 <b>제5장 형사공판절차 지원 -----</b>	 <b>97</b>
1. 개관 -----	99
2. 기록 열람·등사 -----	99
가. 근거규정 -----	99
나. 열람·등사 범위 -----	100
3. 공판기일 출석 -----	101
가. 근거 규정 -----	101
나. 좌석배치 -----	102



4. 의견의 진술	102
가. 형사소송법 규정	102
나. 성폭력처벌법상의 특례	103
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는 경우	104
5. 증인신문 절차	105
가. 피해자가 아동 및 장애인인 경우	105
나. 비공개 재판	105
다. 증인신문 시 피고인과의 분리	106
라.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106
마. 증인지원실 방문 및 증인보호신청서 제출	106
6. 기타	107
가. 디지털 성착취물 증거조사의 문제점	107
나. 전문가 의견조회 요청	108

## 제6장 민사재판 지원 109

1. 소송 제기	111
가. 민사소송 제기 시기	111
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 고려	112
다. 보전 처분의 필요성	113
라. 청구액의 산정	114
2. 소송위임과 소송비용의 문제	115
가. 소송위임관계의 확정	115
나. 소송비용 문제	115
3. 소송수행 전략	116

## 제7장 기타 사법지원 ..... 117

1. 피해자 보호 조치 ..... 119
2. 언론 등에 의한 신원 및 사생활 누설 피해 구제 ..... 120
3. 주민등록번호 변경 ..... 121
  -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121
  -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 121
4. 개명 ..... 122
  - 가. 개명 개관 ..... 122
  - 나. 개명 절차 ..... 123

## 제8장 유관기관 ..... 125

1.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운영 기관 ..... 127
2.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 128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단체 및 성폭력상담소 ..... 130
4. 해바라기센터 및 무료법률 지원 기관 ..... 132
  - 가. 해바라기센터 ..... 132
  - 나. 무료법률 지원 기관 ..... 132

## 〈부록〉

1.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 133
2. 증인 지원 신청서 ..... 134
3. 사건 지원에 필요한 용어 ..... 136

## 주요 법령 및 약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3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약칭: 특정강력범죄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6호, 2016. 1. 6., 일부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제정]

그 외 법령 본문 기재 참고



# 제1장

##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 》 제1장

##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 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 가. 젠더 폭력으로서의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sup>1)</sup>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 위계에 기반한 젠더폭력<sup>2)</sup>을 의미

- 1) 최근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성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이버 성범죄/성폭력 혹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성폭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적 구별에 주안점을 둔 정의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합니다(한국양성평등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성범죄, 성폭력이라는 개념과 함께 ‘성착취’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합의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나 대가를 위해 성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아동을 찾아내거나 알선 및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이하 양형위)가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으로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양형위가 설정한 제한적 범죄군으로 발생하는 처벌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실제 디지털 성범죄의 범주는 정보통신망이나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젠더폭력 일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성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사용하였습니다.

- 2) 젠더기반폭력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에 대한 관념 틀인 젠더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폭력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언어적 통제와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데이트 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조혼, 인신매매, 여아 낙태, 할례(성감대 절단), 명예살인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젠더 폭력 혹은 젠더기반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젠더기반 폭력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젠더화된 사회구조의 맥락에서 비롯됩니다. 젠더에 따른 차별과 혐오는 젠더기반 폭력을 발생시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기반 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통합적 이해뿐 아니라 사회 구조의 불평등 제거를 통해 사회 구조 변화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강의기획 매뉴얼(2019)」 p.10).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뿐 아니라 성적 이미지 합성 편집, 정보통신매체를 수단으로 한 성적 이미지 등 전송, 비동의 유포, 성착취물을 매개로 한 유포 협박, 강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 전반, 즉 성적 괴롭힘, 성매매 요구 또는 강요, 온라인 그루밍 등의 범죄를 사이버 성범죄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국내 법체계상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 및 7항),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나.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와 흐름

최근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루아침에 나타난 신종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하고 추적한 상당수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 사건을 ‘소라넷’-‘웹하드카르텔’-‘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유통 사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공유·유포하던 범죄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sup>3)</sup>

‘소라넷’은 불법촬영물 온라인 유통 범죄의 시초로 평가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소라넷은 1999년 개설된 이래로 2016년 폐쇄되기까지 가입·활동 회원 수만 100만 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사이트였습니다. 소라넷의 회원들은 사이트 내에서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공유하였으며, 약물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모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라넷을 불법·유해정보

3) 머니투데이, ‘소라넷→n번방→?’ 20년 ‘성착취 카르텔’..“한국이 부끄럽다”, 2020. 3. 24.(최종검색일 2020. 11. 18.)



사이트로 판단하여 접속을 차단하였으나 소라넷은 접속이 차단될 때마다 주소를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하였습니다. 소라넷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청원과 문제 제기 끝에 2016년 4월 네덜란드 현지 핵심 서버가 압수수색 당하고 운영진과 광고주 등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라넷이 폐쇄되고, 운영자가 처벌받은 뒤에도 ‘제2의 소라넷’을 자처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사업자,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가 카르텔과 같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며 부당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웹하드 카르텔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 운동과 공론화 끝에 2018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웹하드 업체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웹하드 등록제를 따르는 등 외관상 합법적인 운영을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일반인을 불법촬영한 사진, 성관계를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해당 웹하드 업체의 소유주는 필터링 업체 또한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는 불법촬영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업로더’들을 직접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수익을 얻기 위해 필터링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로 조절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웹하드 공유 사이트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유작’이란 제목으로 불법촬영물이 다시 유통되는 등 반인륜적인 거래 행태가 이어졌으나, 업체는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다크웹 성착취물 유통사건’은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와 이용자가 처벌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한국인으로, 그가 운영하는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에서는 120만여 명의 이용자와 4천여 명의 유료 회원이 운영자가 세운 “성인 포르노 업로드 금지” 원칙에 따라 아동성착취물 25만 개를 공유하였습니다. 32개국 수사기관의 국제공조로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들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이트를 최초로 만들고 운영하여 범죄수익을 거둔 한국인 운영자 손 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sup>4)</sup>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손 모씨의 송환을 요청함에 따

4)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1640 판결,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2855 판결. 피고인이 상고취하함에 따라 2019. 5. 14. 확정.

라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시민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인함과 손 모씨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공분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국내 법원에서 처벌받지 않은 국제자 금세탁 혐의를 근거로 인도 절차를 요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7. 6. 손 모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불허하였습니다.<sup>5)</sup>

과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하던 시절,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었으며, 피해촬영물 또한 범죄의 산물이 아닌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즐길 거리로 희화화되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환경과 온라인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해악 또한 심화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의 성폭력과 온라인 공간의 여성·약자 혐오 문화가 디지털 기술과 만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이자 ‘놀이’이자 ‘산업’으로 진화하였습니다.<sup>6)</sup> 디지털 성범죄는 여타 성폭력 범죄와 달리 가해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쉬우며, 온라인의 익명성 탓에 가해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저항감이 적기 때문입니다.<sup>7)</sup>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는 협업적·집단적 성폭력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쌍방향 소통 기술의 발전으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현실과 가상공간에서 동시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2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 가. 공간적 특성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인 까닭에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

5) 서울고등법원 2020. 7. 6. 선고 2020토1 결정.

6) 김소라, <디지털 자본주의와 성폭력 산업>, 《여성이론(41)》, 도서출판 여이연, 2019, 12쪽.

7) 이윤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자료집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0, 123쪽.

습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들은 국내 사이트뿐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나 외국계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SNS를 적극 활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곤 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나 외국계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SNS 등은 국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지하고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상당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포되며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피해는 온라인 공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몇몇 가해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유출된 SNS, 연락처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위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범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 나. 피해의 특성 - 극심한 불안, 자책감 등

디지털 성폭력의 주된 특성은 피해자를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불안은 주로 유포, 재유포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촬영물, 성착취물이 제작된 경우는 물론, 최초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촬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제작 당시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며, 유포 범위, 유포 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1회 유포가 무제한·무차별적인 재유포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촬영물,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이나 스토킹도 피해자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상당수 피해자가 특정된 가해자 혹은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촬영물, 성착취물을 빌미로 한 협박, 성적 모욕 등의 위협에 시달린 끝에 대인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원인이 됩니다.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 또한 디지털 성폭력

의 주된 특성입니다. 이러한 자책감은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의 외양, 행동 등을 탓하는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 가해자와 인적 유대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지속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은 피해자의 죄책감을 강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과거 몇몇 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이 낮은 성인지각수성에 기반하여 피해자의 동의, 자발성을 범죄 불성립 및 감형의 주된 요소로 판단하였던 전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임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피해자의 사건 해결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최근 몇몇 사건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느끼는 자책감,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범행이 장기화되고 피해가 심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상당수 가해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세뇌하듯이 강조하며 피해자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자극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 3 상담과정에서 고려할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

디지털 성폭력은 범행의 공간적 특성, 범행 수법의 측면에서 전통적 의미의 성폭력과 구분됩니다. 한편 피해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성폭력은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성혐오를 범행의 기저로 삼는 전통적 성폭력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지원할 때는 ‘기존의 성폭력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범행의 매개체가 복제·재생산이 용이한 ‘촬영물’이라는 점, 유포 공간이 ‘온라인’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피해의 전파성, 촬영물의 데이터화로 인한 범행의 비물리성, 초국적성, 익명성 등 전통적 성폭력과 구분되는 디지털 성폭력만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경위를 이해하고

범행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현실 공간과 구분되는 사이버 공간 특유의 문화 역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이나 지지 상담 시에도 삭제 지원 등 기존 성폭력 피해지원 방안 외에 디지털 성폭력에 특화된 형태의 지원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가. 피해 재생산

디지털 성폭력의 대표적 특성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전파성’입니다. 피해촬영물, 성착취물이 끊임없이 유포된다는 것은 곧 피해를 종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은 과거에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피해에 대한 지원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원 사건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해자에 의한 새로운 양상의 피해를 연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모욕 등 2차 피해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인적으로 고립되거나 근거 없이 비난받는 경우,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나. 불안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성폭력이 당사자가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광활한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상당수 피해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피해촬영물, 성착취물이 언제, 어디서 유포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까닭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여성, 아동·청소년의 신체 이미지가 온라인 공간에서 죄의식 없이 거래되고 소비된 문화적 배경 속에 피해자의 불안은 확대되고 구체화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불안 정서는 개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평범한 순간 피해자를 엄습합니다. 대다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 버스를 탈 때, 잠을 잘 때, 사람을 마주칠 때,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은 범행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과 디지털 성착취물이 쉽게 소비, 유통되는 사회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인의 기질이나 과대망상으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는 피해자의 불안을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 진지하게 평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다. 피해자를 향한 고정관념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방해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또한 성폭력의 한 양상이므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에 시달립니다.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피해자가 얼마나 무결하고 순결한지를 검열해온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자발성’을 빌미로 작동합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합의했기 때문에, 스스로 촬영했기 때문에, 가해자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등 피해자의 ‘자발성’을 탓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과 낙인은 다양한 방향으로 피해자를 검열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인지하고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피해를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상담할 때는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며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정형화된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을 상정하여 피해자가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피해를 의심하는 시선 또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며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형적피해자상’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일환으로 수치심만을 강조한 결과 성적 불쾌감, 분노 등을 느낀 피해자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식의 인식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의 인격체이며, 다양하고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피해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피해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상담, 지원할 때는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라.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지기반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특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문화적·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홀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 또한 피해지원의 영역이므로 안전망을 만들 조력자와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일 수 있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였을 때,<sup>8)</sup> 수사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도전이거나 수치심을 감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조력자·지원자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과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8) 강희영, ‘디지털성범죄피해의 복합성과 정책과제’ 이화젠더법학, p.64.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사건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운 요인을 1순위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제2장

### 관련 법률 제도의 이해



## 》 제2장

### 관련 법률 제도의 이해

#### 〈디지털 성폭력 처벌법규 개관〉

유형	적용법률 및 주요 구성요건		비고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불법촬영(의사에 반하는 촬영) 제작	상습범 가중 미수범 처벌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불법촬영물 유포, 비동의 유포 영리목적 유포 아청 성착취물 영리목적 유포 아청 성착취물 단순 유포	-
재유포	상동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1호	음란물 등 불법정보 전송	-
이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아청 성착취물 소지 시청	미수범 처벌
편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반포목적 편집 등 편집물 유포 영리목적 편집물 유포	상습범 가중 미수범 처벌
유포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3호	성착취물 이용 협박 성착취물 이용 강요 공포 유발 문자 등 반복 전송	상습범 가중 미수범 처벌 -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1호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불법정보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의무 기술적 조치 의무 유통방지 의무 위반시 과징금 시정명령 등 위반시 과태료	-

유형	적용법률 및 주요 구성요건		비고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통신매체 이용 음란물 전송 등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명예훼손 공연히 모욕, 성희롱	-
제작 강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피해자 이용 추행 간접정범 성착취물 제작 목적 알선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행위 등 정의 스토킹범죄	
기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폭력 범죄 목적 예비 음모 불법촬영기기 설치 목적 침입	-
2차 피해등	성폭력방지법 제8조, 제36조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고용주 의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피해자 인적사항 유포금지 삭제지원의 방법 등, 삭제지원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 1 촬영 및 제작

### 가. 유형 및 사례

‘촬영’은 성적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가해행위를 총칭하는 말로, 촬영 방법은 가해자가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가해자가 직접 촬영 기기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촬영하게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촬영은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촬영의 예시로는 불법 촬영기기(소위 ‘몰래 카메라’ 등)를 모텔,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한 후 탈의 장면이나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경우,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등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작’이란 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가해 유형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하도록 하

여 전달받는 범죄 행위를 이릅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제작에 관여하거나 촬영 내용을 요청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 및 제작의 가해자는 대개 피해자를 기망, 유인, 협박 또는 강요하거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등 조건부로 유인하여 촬영물 및 이미지를 취득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는 광고, 화보촬영 아르바이트 제안, 조건만남, 스폰서 제안 등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삭제, 개인소장 등을 조건으로 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얻어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촬영 및 제작 가해자 상당수가 피해자의 동의, 자발성을 주장하나, 실제 범행 양상은 피해자의 동의 범위가 범행에 비해 한정적이거나, 가해자의 기망, 유인, 협박, 강요 혹은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 등으로 피해자가 온전히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합니다.

## 나. 성인에 대한 촬영

### 1) 관련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판례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sup>9)</sup> 구체적으로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sup>10)</sup>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9) 헌법재판소 2016. 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1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요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입고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경우, 피해자가 촬영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붙는 옷을 입거나 노출을 하는 방법으로 신체를 드러낸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화되었습니다.

과거 레깅스 입은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도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이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sup>11)</sup>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특정 신체부위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확인하고, 나아가 신체가 ‘직접 노출되지 아니한 부위’라 하더라도 몸에 밀착되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이 포함된다면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른 신체 부분, 가령 여성의 허벅지나 배 등도 경우에 따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촬영의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해자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는 표현 대신에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sup>12)</sup>

1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인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촬영의 대상, 촬영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요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다고 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촬영행위에 명시적인 거부의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sup>13)</sup> 평소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적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sup>14)</sup>

최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함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 스스로 성적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sup>15)</sup>

13)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6257 판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동의한 촬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1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고소인과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또는 고소인의 명시적인 반대사표시 없이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5)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해당 법리는 연령과 무관하게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상해, 추행, 자해 등의 행위를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사례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신체부위를 촬영한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up>16)</sup>

촬영을 하였으나 저장에 이르지 않은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촬영이 개시된 때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장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미수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sup>17)</sup>

16)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참조.

17)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게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촬영(제작)

### 1) 관련 법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착취물 제작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촬영 동의 여부나 직접 촬영 여부는 문언상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한 양형기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판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적용의 주요 쟁점은 ‘제작’의 의미와 해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경우 또는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sup>18)</sup>

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으로서, 원심은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였습니다.

18)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자·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뒤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경우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sup>19)</sup>

19)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결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그 취지는 ①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현실, ②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③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라.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만원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착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뒤에서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고,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 제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걸 목격한 주변에 있던 사람이 소리쳐서 제게 알려준 덕분에 바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같이 버스에서 내려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해서 보니 사진첩에 저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의 불법촬영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걸 보니 왠지 인터넷에도 막 유포하진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너무 악질적인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상담 사례 각색

디지털 성폭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촬영물을 삭제하기 쉬우므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호소할 경우 조력자, 지원자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가거나 112에 신고하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이후 형사 사건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조력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유포

등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기민하게 포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촬영과 동시에 가해자의 드라이브에 피해촬영물이 업로드되거나, 이미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유포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유포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삭제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삭제 및 피해자 상담을 신속하게 요청, 연계해야 합니다.

## 2 유포 협박, 강요

### 가. 유형 및 사례

유포 협박, 강요는 성행위 촬영물 또는 피해자가 스스로 올린 비공개 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가해 행위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예로는 가해자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별 후 재회 요구 등의 수단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소위 ‘일탈계’를 운영하는 10대 청소년의 개인정보 및 SNS 계정 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취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몇몇 가해자들은 유포 협박을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나. 관련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최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하여 새로운 성착취 범죄를 꾀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 협박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SNS에 익명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한 촬영물이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후자의 경우 과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 내지는 강요죄만 적용할 수 있어 처벌 수위도 낮고 피해자가 가명 사용 등 법령에 규정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0. 5. 19.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이 신설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범행 초기 협박, 강요를 당하는 경우에도 즉시 수사기관에 성폭력 범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다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전 남친이랑 그 자리에서 지우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지웠는지 핸드폰도 확인했었는데, 제가 헤어지고 싶다고 하니까 사실 그 영상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면서 헤어지면 유포해 버릴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다 확인했었으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영상을 뿌릴까봐 너무 불안해요. 누구한테 알려도 유포할 거고 경찰에 신고해도 유포할 거고 헤어져도 유포할 거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앞으로 계속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건지 그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상담 사례 각색

## 1) 대응방법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알리면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를 회유하고 설득하는 등 개인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가진 촬영물을 압수하고 유포하지 못하도록 수사기관, 사법기관의 강제력 있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개인적 조치를 넘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제도적 대응을 위한 지지기반 필요

유포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까지는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담자, 지원자는 피해자의 절박함과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조력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피해자가 배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3 유포 및 재유포

## 가. 유형 및 사례

유포 및 재유포는 이미 촬영·제작된 성착취물, 피해촬영물을 유포 또는 재유포하는 가해 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하여 촬영 당시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으나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자의 개인소장을 조건으로 진행된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보복성으로 유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가해자들끼리 성착취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포 및 재유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개별 SNS 계정 또는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등도 유포 및 재유포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의 아이디나 접속 링크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는데, 방대한 양의 영상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의 업로드 행위와 불법 촬영물을 주로 다루는 특정 사이트 운영자의 방조행위 등도 유포 및 재유포 유형의 범죄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나. 관련 법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다. 판례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sup>20)</sup>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주요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유포’로, 피해자 본인이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적용 대상입니다. 즉 본인이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는 처벌됩니다.

촬영물 및 촬영물의 복제물 그리고 복제물의 복제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토렌트 파일을 촬영물 및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바 있으나, 대법원은 토렌트 파일 역시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촬영물 및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sup>21)</sup>

‘영리를 목적으로 한 비동의의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영리목적’은 단순 양형사유가 아닌 구성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 하한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판례는 현금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문화상품권을 교부한 경우에도 대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직접적인 이득이 아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간접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영리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sup>22)</sup>

20)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2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은 ‘토렌트 사이트에 위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2)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인에 대한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1호(불법정보 유통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유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1호가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된 하급심 판례는 일부 확인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이 피해자의 의사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처럼 직접 피해자의 유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촬영물의 내용, 유포 및 재유포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비동의를 추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최근 신설된 불법촬영물 소지죄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라.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몇 년 전에 남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헤어질 때 지운다고는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인터넷에 혹시 제 영상이 올라오진 않았는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인이 어떤 사이트에 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영상을 확인한 뒤 너무 힘드네요.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영상이지만 편집되어서 전 남친은 안 나오고 저만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얼마나 퍼졌을지 몰라 불안하고 힘듭니다. 당장 다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상담 사례 각색

### 1) 대응방법

유포 피해 이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중 하나는 삭제지원입니다. 피해를 수습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전문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

이 필요합니다. 삭제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와 관련된 정보들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촬영물 원본, 유포된 URL 링크 주소, 유포된 사이트의 이름 등 어디에 어떤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신속한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타인을 통한 피해 사실 인지

보통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피해자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는 많은 경우 타인을 통해 피해 경위를 인지하게 됩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촬영물을 누군가가 보는 것을 원하지 않고, 특히 주변인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목격자에 의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과정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격자를 통해 유포 링크 등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를 인지한 시점과 실제 피해가 발생한 시점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피해 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삭제지원을 넘어서 피해 회복 지향

삭제지원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에 필수적이지만, 삭제지원 자체의 한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빠르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삭제지원이 피해자의 바람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느낄 경우 피해자는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좌절이나 실망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하되, 삭제지원만을 유일한 피해 회복 방안으로 여기지 않도록, 피해자의 임파워링(Empowering)과 일상의 회복을 지향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 4 허위영상물 등

### 가. 유형 및 사례

허위영상물 등의 유형으로는 피해자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편집하여 합성하거나 그러한 합성 편집을 의뢰하거나, 합성물과 그 복제물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올린 이미지 혹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 편집을 하는 경우, 허위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광고를 하여 의뢰를 모집 및 제안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나. 관련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SNS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SNS에 공개된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이른바 ‘딥페이크’)이 제작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자, 2020. 3.

24.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5 소지 등

### 가. 유형 및 사례

2020. 5. 19.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이외에도 성인에 대한 불법촬영물 또는 비동의 유포 피해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지 등의 경우에는 소지자가 불법촬영물 또는 비동의 유포 피해촬영물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지자가 당해 영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으로 사안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지자가 불법 포르노 사이트나 디스코드 등을 통하여 소위 N번방 영상물 내지 불법촬영물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거래를 통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면, 소지자는 당해 영상물이 불법촬영물 또는 비동의 유포 피해촬영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소지자가 영상물을 소지하게 된 경로와 그 경로에 이르기까지의 검색 행위 등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밝혀 소지죄의 범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 관련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다. 판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때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sup>23)</sup> 2012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포함되도록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개정되었습니다.

법개정 이후에도 동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23)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각종 매체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sup>24)</sup>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sup>25)</sup>

## 6 성적 괴롭힘

### 가. 유형 및 사례

온라인 공간 내의 성적괴롭힘에는 성적 내용을 포함한 인신공격성 모욕 등 명예훼손 행위, 성희롱, 성적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유출, 성범죄 모의, 성적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 전송, 게임 채팅 및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신분도용 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성적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성착취물과 함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주소, SNS 계정 주소 등을 노출한 사례, 성적 내용을 포함하여 사실무근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외적 명예를 훼손한 사례, 신분을 도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유도하고 성범죄를 기획하여 실행한 사례, 신체를 노출한 사진 등을 전송하고 성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례, 온라인 불법 음란사이트 접속 링크를 제공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24)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나. 관련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판례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sup>26)</sup>

SNS 메신저, 문자 등을 이용하여 신체 부위 등 성적 내용을 담은 말 그림 영상 등을 접속할 수 있는 웹주소(링크)를 제공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sup>27)</sup> 다만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직접 노출 행위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sup>28)</sup>

26)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7)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제로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제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8)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라.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제가 즐겨 하는 게임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절 모욕했습니다. 욕설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제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여러 명이 조롱했어요. 제가 해명 댓글을 달아도 소용이 없고 그동안 함께 게임 했던 사람들마저 절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상담 사례 각색

### 1) 대응방법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성적인 괴롭힘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도용하거나 피해자 사칭, 명예훼손성 성적인 모욕, 성적인 내용의 인신공격 등 여러 방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플랫폼과 피해의 세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캡처본과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신원불상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의 정보(아이디, 닉네임, 계정명 등)가 있으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2) 성폭력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성폭력

현실 세계에 일일이 범죄화하지 못하는 섬세한 성폭력이 존재하듯,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금까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폭력’이라고 제대로 명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도 자신이 겪은 일이 불쾌하고 황당하지만, 이를 성폭력이라고 말해도 될지 조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이 왜 성폭력인지,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충분한 지지상담과 더불어 임파워링이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 3) 성폭력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성

최근 디지털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처벌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성적 괴롭힘의 영역은 법적 공백에 놓인 사례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범죄나 모욕죄로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현행법의 한계와 대응에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나 상담사 등 지원자는 피해자와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성폭력 피해지원의 관점에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소송 외적으로 의료적·경제적·심리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활동가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 가. 유형 및 사례

2차 가해는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알린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가해행위들로 구성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포된 성착취물, 피해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 재유포하는 경우 2차 가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촬영물을 공유하는 웹하드, 온라인 불법 사이트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위 플랫폼의 이용자, 기타 온라인 대화방의 참여자 역시 넓은 의미에서 2차 가해의 가해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욕, 무고·명예훼손·협박 등 보복성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등도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관련 법령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20. 6. 9.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인터넷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물을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삼아 유통을 조장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웹사이트를 운영한 회사와 대표이사 가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sup>29)</sup> 그러나 위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이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명문화 되어, 위 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온라인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러한 차단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므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의 한도 내에서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위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업로드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甲 회사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인력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규범적으로 음란물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甲 회사는 평소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1) 불법정보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4. 제44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촬영물이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2)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 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3의4.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4.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제22조의5...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1의2.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통신망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합성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받거나,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동법 제22조의6 제1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업 또는 정지명령(동법 제27조 제1항), 시정명령(동법 제9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5조의2).

동 규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유통방지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유포되는 경우가 많고, 인적사항과 함께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상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실명, 나이, 직업, SNS 사진을 게시하면서 불법촬영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삭제조치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삭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당시, 특정 피해자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에 상당 기간 동안 노출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이 포함된 콘텐츠들이 재생산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고 피해사실이

직장에게까지 알려져 피해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위와 같은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4조가 금지하는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 또한 불법촬영물 등에 준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피해자가 인적사항 또는 피해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접속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법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3) 기술적, 관리적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3의5.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



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3.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의2. 제22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의2. 제22조의3 제4항 또는 제22조의5 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 ① 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 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② 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⑥ 법 제22조의5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열거하고 있는데, ①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② 종전에 신고, 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 등과 제목, 명칭 등이 동일한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③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비교, 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④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

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업 또는 정지명령(동법 제27조 제1항), 시정명령(동법 제92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6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104조 제1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한 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정보로 심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동일한 정보를 올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8 2차 가해

### 가. 유형 및 사례

성착취물과 함께 또는 성착취물의 피해자라는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유포되는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나. 관련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법 제8조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 다.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 1) 피해사실 유출 및 허위사실 소문

“피해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인들에게서 자주 괜찮냐는 안부 연락이 뜬금 없이 왔어요. 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 피해에 대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피해 영상을 보았는지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피해 내용뿐 아니라 저에 대한 헛소문까지 나서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상담 사례 각색

#### 가) 대응 방법

피해 사실 유출은 피해의 재생산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 유출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모욕적 내용과 동반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회복 과정이 방해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법적 대응 등 공식적 대응과 비공식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으로는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고소를, 민사적으로는 행위의 중지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적 대응방법은 피해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상대방과 협의하는 개인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에 따른 피해자의 불안과 심리적 고통을 돌보며 대응 방법을 세심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 내적 지지기반 마련

2차 가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자원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

다. 헛소문이 나거나, 주변인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내적 자원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피해자 주변에서 피해자를 든든하게 조력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며, 지원자 또한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닌 2차 가해를 행하는 사람의 몫으로 넘길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피해 당시 저의 신상정보가 같이 유포되어서 저를 아는 사람이 피해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누군가가 제 피해영상을 보고 상사에게 알렸나봐요.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진짜 제 영상인지 확인하시고는 회사 이름도 같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다고 회사명이 나온 게시물을 빨리 다 삭제하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상담 사례 각색

### 가) 대응 방법

성폭력 피해 사실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모아 성폭력방지법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증거확보를 생각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해 자의로 사직한 것처럼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한다면 피해자가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에 따라 피해자가 이미 피해 사실이 소문나버린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치 않아 복직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문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도리어 피해자의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 나) 개인정보 변경 및 생계비 지원

피해자의 피해촬영물과 개인정보가 함께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 제도의 생계비 지원 등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9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online grooming)

### 가. 유형 및 사례

온라인 그루밍은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심리적인 의존도를 악용하여 촬영물 등을 얻어내는 방식의 가해 행위 유형입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은 정보통신망에서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 권유 행위를 하면서 성착취물 제작 및 성매수 등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나. 관련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최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 피해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상담 전략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40대 남성과 14세 여성청소년이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점잖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말과 함께 여성청소년에게 신체 촬영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용돈까지 주며 예뻐하는 아저씨를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무릎, 어깨 등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하다가 가슴과 성기 등의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남성의 행각은 여성청소년의 부모가 여성청소년의 핸드폰을 통해 대화 기록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보낸 영상인데 무엇이 문제냐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상담 사례 각색

### 1) 대응방법

그루밍을 통한 착취로 인해 신체 촬영물이 제작되고 이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과 강요, 유포 등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루밍은 많은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채팅 플랫폼, SNS 등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 시 이에 따른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선 피해 발생 직후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두려움과 공포, 당황스러움 등으로 피해 증거를 스스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교사가 해당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메신저 방을 삭



제해버리거나 증거확보 과정 없이 대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 보존을 위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 2) 그루밍 성폭력의 특성

그루밍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친밀감, 신뢰, 애정을 느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응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개입되어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대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피해자 상담과 대응을 병행하며 경찰 신고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본질적인 피해 회복에 가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인식 부재로 인한 2차 피해

아동·청소년 피해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자가 피해 사실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않은 데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해,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취급되고, 해당 사건이 성폭력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비행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지원 시 주요 보호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피해자의 취약성 탐색과 지원

피해자가 그루밍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과 배경 또한 지원 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진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되거나 계속해서 그루밍 성폭력에 취약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에 따라 피해자 긴급지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교우 관계, 가정환경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0 기타 범죄유형

### 가. 성착취물 제작과정에서 강제추행, 상해 등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보내도록 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을 인정하였습니다.<sup>30)</sup>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를 경우 피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을 적용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위 판례의 법리는 연령과 무관하게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상해, 추행, 자해 등의 행위를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사례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나.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995년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22년만인 지난 2021.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톱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그러한 스톱킹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스톱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하였지만, 이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될 뿐이었습니다. 스톱킹처벌법상의 스톱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경찰은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sup>31)</sup>

## 다. 불법촬영등을 목적으로 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 등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나 찜질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하였을 때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간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등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더라도 해당 침입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31) 스톱킹처벌법 제4조 제1항.

## 라. 성착취물 제작을 위한 아동·청소년 알선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성착취물 제작에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사례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등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지속적인 결합체”로,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sup>32)</sup>

3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최근 하급심 법원은 소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개인정보 탈취, 범죄수익의 현금화 등 주된 범죄행위 역할 분담과 기능적 행위 지배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뿐 아니라 주범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착취물을 제공받고 그 과정에 개입한 자, 즉 소위 ‘유료회원’으로서 범행에 가입한 경우까지 범죄집단 가입·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sup>33)</sup>

향소심 또한 피고인들이 공동 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를 이루어, 역할분담 및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방대한 양의 채팅을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유지하거나 홍보에 기여하며 신규 참여자들이 유료방 참여자로 전환되는데 영향을 미친 유료회원,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범행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 등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sup>34)</sup> 이 사건은 2021. 7.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추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합486 등 판결과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가 배포한 ‘서울중앙지방법 2020고합486등 범죄단체조직등 사건 설명 자료’를 참고하면 재판부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상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피고인 조○빈과 그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으로서,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은 텔레그램 박사방 및 ‘시민의회’, ‘노아의 방주’ 방에 참여하였는데 위 방들은 모두 피고인 조○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피고인 조○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대체로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직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함.” 한편 피고인들은 범죄수익 분배에 가담한 바 없으므로 범죄집단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도 법원은 “가상화폐의 제공·취득은 일련의 성착취 범행이 이어지고 반복된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동기임. 피고인 조○빈이 구성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은 피고인 조○빈이 암시한 성착취물이나 고액방 등이 실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참여하면서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범행에 협력하였고, 이는 결국 일련의 범행이 반복되고 더욱 고도화되는 원인이 됨. 피고인 조○빈의 지시에 따른 다른 구성원들의 범행 가담 행위는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임을 인정하고,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4) 서울고등법원 2021. 6. 1. 선고 2020노2178, 2021노236(병합) 판결.

## 제3장

###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과 자세





## 》 제3장

###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과 자세

#### 1 ▶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형사절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절차 공판절차 참여 및 의견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검찰 수사 시 동행, 의견서 제출</li> <li>-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li> <li>- 증거보전 절차</li> <li>- 공판절차 등</li> </ul> </li> <li>●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li> <li>- 범죄피해자지원, 접근금지 등 국가 지원 절차</li> </ul> </li> </ul>
형사절차 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형사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사 가사 사건, 주민등록변경 및 개명 신청</li> </ul> </li> <li>●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 등 지원기관 연계</li> <li>-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소통</li> </ul> </li> </ul>

## 2 피해자 지원의 기본

### 가. 상담 및 자문 시 충분한 정보와 선택지 제공

#### 1) 지원 절차 및 체계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의 동의 구하기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는 것은 물론 예측할 수 있는 유·불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주체이기도 하므로 피해자가 보장받을 권리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절차에서 소외되거나 본인의 의사가 법원이나 피고인 측에 불충분하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서도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피해자의 결정과 진술이 가지는 법적 효과에 대해서도 안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신뢰하는 것은 물론, 형사절차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2)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

피해자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사건을 대하여야 합니다. 선불리 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발언이나,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를 가볍게 평가하는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피해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 대응 수단은 피해자마다 다양하므로 확실적인 피해자 상을 강요하거나 편견을 바탕으로 한 상담은 지양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나 공판절차에서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 의한 부적절한 접촉 시도나 합의

강요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심리 비공개, 신뢰관계인 동석, 증인지원제도, 피고인 퇴정 조치, 신변안전조치, 증거조사 제한 신청 등 법률에 규정된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 의견개진(‘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 및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변호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소 이후부터 피해자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 변호사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상담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질문해야 하며, 질문의 의도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반복적인 피해 진술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상담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단체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를 타 단체에 연계할 경우 간략한 상담 요약서를 보내는 방법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재차 진술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여 진술을 녹음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한 삭제지원 및 추가 유포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을 덜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 등 관련 기관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 나. 형사절차에서의 역할

### 1) 형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 절차 참여 및 의견 진술의 중요성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때 피해자의 사건 해결 의지가 지속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원치 않은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본인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경험은 피해자가 이후 관련 법적 절차에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므로, 실질적 피해 회복 차원에서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 전, 공판에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 전, 판결 선고 전 단계에서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필수적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증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변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신문기일 준비, 진술이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거나 안정적으로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피해 회복 여부나 가능성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되어 실질적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반성문이나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 반해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의견이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촬영물 이외에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 피해가 가볍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법촬영이나 비동의 유포로 인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합의, 조정 등 피고인 측과의 소통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묻거나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직접 소통할 경우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도록 하고, 피고인 측이無理하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할 경우 재판부에 부당한 합의 시도와 2차 가해 위험을 알릴 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금융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합의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얼마가 되었든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금전배상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마치 금전적인

배상만을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과 같이 피해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거나, 합의로 인하여 가해자의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대안과 형사 합의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한 끝에 형사 합의 제도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처벌불원 의사 제출, 부제소합의의 의미 등 합의의 법적 효과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특징<sup>35)</sup>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제소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반드시 함께 이뤄질 필요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법원에 제출될 경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존중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의 중재와 분쟁 조정을 통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형사조정은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로, 검사는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후 조정절차에 들어가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검사는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거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종결하게 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통상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해당 사건이 조정사건으로 적합한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와 마찬가지로 조정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정이 이루어지면 불기

35) 형사상 유죄판결을 근거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위자료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준을 참고하되,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인한 위자료 인용 금액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승소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한 과징금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사 소송의 경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므로 가해자의 자력 유무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처분이 있을 수 있고,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한편 조정 위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중 부적절한 발언이나 질의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제재해야 합니다. 조정 시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금융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사전에 당사자와 논의 후 조정에 단독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다. 형사재판 이후의 역할

### 1) 관련 소송 및 절차 지원

선고 기일이 잡힐 경우, 미리 ‘피해자등의 판결등본 신청’을 하면 선고 후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면 상소 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상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형사재판을 전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개명신청 등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가사소송 등 연관 사건을 자문 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절차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의견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나, 형사사건 중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경우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기타

연계 단체 및 범죄피해자구조 등의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 지원 파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3 상담 유형별 유의점

#### 가.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유의할 점

피해자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로 피해자를 대해야 하며,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 하되, 자책하지 않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절차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대 지원 단체를 통해 심리적,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의 첫 번째 원칙은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며,<sup>36)</sup> 이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의무자인 부모, 교사 등이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범죄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훈육을 빌미로 피해자를 나무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주변인을 조력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sup>37)</sup>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에게 피해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을 때 무조건 반대 의견을 강요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경우 피해자에게 그 필요성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며 성장한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36) 성폭력방지법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37) 이미정·윤덕경·정수연·유경희·김영란(2020),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79.

엄밀히 구분하지 않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현실만큼 친숙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자아형성이나 관계 형성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입니다. 현대의 아동·청소년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과 소통하거나 친구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입니다.<sup>38)</sup> 이런 까닭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지배당하거나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자신이 성착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sup>39)</sup>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건 해결 의지가 달라지거나, 사건 처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수한 관계 및 진술의 구체적 맥락을 초기 상담 단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가 범죄성립을 판단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인 피해자에 비해 수사나 공판절차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유인이나 협박으로 성적 이미지 등을 보낸 피해자,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 발생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죄책감에 빠지기 쉬우며,<sup>40)</sup> 본인도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건 해결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이런 취약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0. 5. 19.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성매매 ‘대상아동’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처벌하거나 보호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점을 안내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 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

38) 위의 글, p.42.

39) 위의 글, p.54.

40) 위의 글, p.55.



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개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 뒤 이를 상담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교육 수준, 시설 생활 경험 여부, 사회적 관계와 사회 참여 정도, 가족관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 단체나 주변 지지자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이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판단과 선택은 어디까지나 사건을 겪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이 점을 잊지 말고 피해자가 절차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안내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적 장애 여성이 랜덤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 인해 성매매와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는 등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피해자의 경제적 취약성과 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지원자들과의 협조도 중요하나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수이며,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되게 된 경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에 따른 전문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여성인권단체<sup>41)</sup>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성소수자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를 이성애 중심으로 보고 남성 가해자에 의한 여성 피해자의 피해 구도로 이해하여 동성 간 성범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해석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 또한 본인에게 이러한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진단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적체성이나 성별정체성은 범죄 성립이나 피해자의 피해 인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41) 장애여성공감(<https://wde.or.kr>) 등.

피해자 변호사는 성소수자인 피해자를 지원할 때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게 정체성이 알려지는 일(아웃팅 범죄)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변 지인에게 커밍아웃을 하여 관계적 안전망이 있는지, 피해자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는지, 정체성(혹은 아웃팅 협박)을 빌미로 한 협박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적 유형은 동성 간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과 스토킹, 온라인상 정체성과 개인정보를 알리는 식의 아웃팅 범죄 등입니다. 필요한 경우 성소수자 인권 단체<sup>42)</sup>에 문의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라. 이주여성 등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출신국, 국적취득여부, 체류자격의 종류, 취업여부,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에서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민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소송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체류자격을 기타(G-1-11)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sup>43)</sup> 결혼이주여성 또는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등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주민 피해자는 출신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거나, 한국인에 의한 불법촬영 또는 비동의 유포 피해 등 국적을 불문한 피해를 겪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그 특수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민의 체류나 고용 등 복

42)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http://lgbtpride.or.kr>),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https://chingusai.net>), 십대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동(<https://www.ddingdong.kr>) 등.

4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 2. 기타 G-1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중 성폭력피해자 중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취업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등은 출입국관리법 제 24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guide/LawLink.pt>)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합적 문제에 대해서 이주인권단체들의 자문을 얻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sup>44)</sup>

#### 4 지속적인 상담의 필요성 및 치료 안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로 인한 고통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 후 보이는 여러 징후와 감정적 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사건 해결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 및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와 법률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제도 및 관련 단체나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4)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www.wmigrant.org](http://www.wmigrant.org)) 등.

## 5 피해자 지원제도 개괄

### 가. 무료법률지원사업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여 폭력으로부터 방어, 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sup>45)</sup>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사 지원 사업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과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기도 합니다.<sup>46)</sup>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여성,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민사, 가사, 형사 사건의 상담, 수사 의뢰, 수사기관 동행, 고소대리, 소송대리, 변호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sup>47)</sup>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중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대상이 될 것이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중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피해일 경우에도, 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하여 지원가능'한 것으로 구조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sup>48)</sup>

45)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2 참조.

46)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2018), p.61

47) 위 보고서, p.62

4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2018), p.34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여성가족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비는 심급별로 본안사건 120만 원, 재정신청, 항고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은 40만 원입니다. 소송비용은 5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500만 원을 넘을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법무부의 국선 변호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지원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sup>49)</sup>

## 나. 의료비, 주거, 생계비, 학자금 등 범죄피해구조 지원

### 1) 의료비 지원<sup>50)</sup>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이 범죄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와 병원 간병비, 돌봄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sup>51)</sup>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입원 치료 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의 범위로는 신체적·정신적 치료,<sup>52)</sup> 성매매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피부과 비뇨기과 등),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낙태로 인한 부검 및 화장 비용 포함),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신체사정) 및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선지불한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한 보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49) 여성가족부,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p. 197 ~ 202 참조.

50) 여성가족부,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p. 163 ~ 196 참조.

51) 성폭력방지법 제28조, 제3조 등 참조.

52)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을 포함합니다.

의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피해 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 성폭력피해자의 13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돌봄서비스 이용 시(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양육지원, 활동보조인 등) 자부담 비용 분에 대해 최대 6개월, 300만 원 한도에서 돌봄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비 지급 신청을 하려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시군구 등 돌봄비용지원 사업수행기관에 돌봄비용 지급신청서, 돌봄비용 본임부담 증빙서류,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주거 지원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 및 보복범죄의 우려 등 피해자가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의 주거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sup>53)</sup>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보호대상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 나뉘며, 그 보호기간은 시설마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2년 이내입니다.<sup>54)</sup>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나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입소하였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의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피해자가 입소·입주한 사실이 있는 보호시설 등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sup>55)</sup>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로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

53) 성폭력방지법 제3조와 제12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 참조.

54)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의 '성범죄피해자-피해자보호시설'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I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1&cciNo=3&cnpCIsNo=1&search\\_put=](https://www.easylaw.go.kr/CSP/CnpCI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1&cciNo=3&cnpCIsNo=1&search_put=))

55) 여성가족부,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1), pp. 110 ~ 115 참조.

하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임대주택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곳에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sup>56)</sup> 신청이 접수되면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격을 검색하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하여 이미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동시에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한 가지만 발급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생계비 등 지원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sup>57)</sup> 생계비는 월 50만 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되고, 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sup>58)</sup>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 학기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최대 2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sup>59)</sup> 만약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최대 400만 원을 상한으로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sup>60)</sup>

56)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법무부공고 제2020-131호) 참조.

57)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86호, 2019. 4. 15. 발령·시행)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조 제1, 2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등 참조.

58)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범죄피해자-생계비 등 지원' 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3&cciNo=1&cnpClsNo=2&search\\_put=](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3&cciNo=1&cnpClsNo=2&search_put=)).

59)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참조.

6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조의2, 제40조 제1항 참조.





# 제4장

## 수사단계 지원



## 》 제4장

### 수사단계 지원

#### 1 상담 및 고소장 제출

#####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시 유의사항(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상담하기 전에 이러한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의 복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유포 협박, 유포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은 무제한으로 복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는 1회로 그치지 않으며, 가해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성폭력은 간음, 추행 상황이 일단 종료되고 나면 범행이 무제한으로 반복되지는 않으나, 촬영물 유포는 해당 피해촬영물이 온라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으며, 유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하더라도 촬영물 소지자가 온라인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유포가 재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유포 전 협박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sup>61)</sup>

둘째,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 비난 등의 인식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

61)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2019), p.13

니다. 피해자의 주위 사람이나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한 일로 보거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일차적인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의 사소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등으로 인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데 소극적으로 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 채 불법영상물 삭제에만 신경을 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sup>62)</sup>

셋째,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유포 불안에 시달리면서 유포된 촬영물을 검색하고 삭제 요청을 하느라 일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직장을 퇴사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며, 대인관계를 단절하는 등 사회적 고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실직하는 경우 개명, 이사, 성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입증, 유포된 촬영물에 대한 삭제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경제적인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자해나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겪는 일상의 어려움은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sup>63)</sup>

## 나. 증거 확보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정보통신망 및 전자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물적 증거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에도 메시지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등 사후에 물적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가 우연히 범죄를 인지하였으나 상대방만 증거를 가지고 있어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은 고소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 이외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당사자의 관계, 피해 당시 및 피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이를 구체적

62) 위 보고서 p.14.

63) 위 보고서 p.14.

이고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의 디지털 성범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나 사실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디지털 기기를 열어보거나, 상대방의 계정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sup>64)</sup>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sup>65)</sup>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를 의심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sup>66)</sup>

나아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 대법원은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sup>67)</sup>

64)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②불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65)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6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6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판결, 2010. 9. 9.선고 2008도3990 판결.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신뢰관계인 동석 및 진술조력인 제도

### 1)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증언 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옆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 심신미약자,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2) 진술조력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조력하는 것이 진술조력인의 역할입니다. 법무부에서 전문가를 양성, 관리하며, 진술조력인 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특성에 맞게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 2 경찰 수사단계

### 가. 개관

피해자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 피해자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고소장 제출 → 고소인 조사 입회 → 고소인 진술조서 열람등사 →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내지 추가 증거제출 순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 및 고소 과정에서 법정대리

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up>68)</sup>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선임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대리 없이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sup>69)</sup>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 형사절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사건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아 형사절차를 포기하려 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나. 고소장 제출

피의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소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sup>70)</sup>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의자조사 전에 범죄사실이 고지되어야 할 것이나, 고소장에 범죄사실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기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피의자에게 고스란히 공개될 수도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기재한 고소인의 주소로 처분서, 통지서 등이 송달될 수 있으므로, 송달주소를 어디로 기재할지 피해자와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추후 통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지 선택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거인이나 가족 등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자칫하면 통지서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8)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69)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70)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고소장 및 관련증거를 볼 수 있고, 고소장에 성착취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착취물을 고소장에 직접 인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출력본 보다는 CD 등의 저장매체에 파일 형태로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부서는 유포를 중심으로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으로 협박하는 경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유포가 일어난 경우는 사이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분할되었습니다. 통상 유포 협박은 유포로 나아가기 직전 단계이고 촬영과 연속되는 행위로 보아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지만, 유포는 수사 과정에서 기술적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촬영사건으로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던 사건도 유포 피해가 발견되면 사이버수사대의 지원을 받거나 공조시스템을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sup>71)</sup>

한편, 피해자가 이미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한 뒤,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별도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다. 수사 입회

### 1) 수사 입회 전 준비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는 성폭력 사건 재판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 입회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71)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2019), p.59.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개방된 공간에서 조사받는 경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대리인은 수사 입회 전에 미리 수사관에게 “별도의 독립된 조사공간 확보”를 요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수사 입회 중 의견 진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대리인은 미리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대리인은 피해자 조사 과정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sup>72)</sup>

## 3) 2차 가해 제지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sup>73)</sup>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sup>74)</sup>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조사하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대질신문 최소화, 긴급하지 않은 수사의 경우 학습권 보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며,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락 및 협조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sup>75)</sup>

72)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73)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1항.

74)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2항.

75)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5조.

피해자 대리인은 수사관이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 4) 가명조서 작성

성폭력 피해자는 고소 및 조사 시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에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인적사항 관리카드’에 보관되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제한됩니다.<sup>76)</sup> 간혹 수사관이 ‘아는 사람 간의 범죄는 가명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가명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대리인은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합니다.

#### 5) 영상녹화

19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합니다.<sup>77)</sup>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심신미약자의 경우 영상녹화물과 진술조력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sup>78)</sup>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려면 영상녹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영상녹화물과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

76) 성폭력처벌법 제23조.

77)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1항.

78)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6항.

여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뒤에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이에 관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영상녹화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sup>79)</sup> 또한 경찰 수사규칙에 따르면,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속기사가 영상물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sup>80)</sup>

## 6) 신변안전조치 요청

피해자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장, 검사 또는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로는 일정기간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안전가옥),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피의자(피고인) 등의 접근금지, 비상호출기(남성)·SOS 국민안심 서비스(여성),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의 통지 신청(피해자 및 국선변호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sup>81)</sup>

## 7) 진술조력인 및 신뢰관계인의 수사과정 참여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79)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2항.

80)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

8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5호, 제13조, 제13조의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sup>82)</sup>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피해자의 연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개인의 성향,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 환경 등으로 인하여 진술 등 조사과정에서 성인에 비하여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수사기관, 법원 등에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up>83)</sup>

## 라.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불법촬영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경우 휴대폰을 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피해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기기나 온라인상 저장공간에 옮기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데 반해, 이와 같은 행위를 추적하려면 해당 디지털 기기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저장 매체를 분석하면 가해자의 범행 시점은 물론 여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유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주거지, 차량, 하드, USB, PC 등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유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을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한 경우, 통상 압수한 휴대폰도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유포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유포 사실을 발견하거나 웹사이트, 온라인 메신저(채팅방),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의 고지 등으로 피

82)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3항.

83)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해를 인지하게 되어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사이트 URL을 복사해서 관리자에게 보내고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삭제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심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동 위원회가 24시간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피해자가 확인되거나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이트 차단을 하게 되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sup>84)</sup>

#### 마. 전문가 의견 요청

수사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의무가 있습니다.<sup>85)</sup> 따라서 피해자의 대리인은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소견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바. 증거보전 청구의 요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상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84)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2019), p.61.

85) 성폭력처벌법 제33조 제1항, 제4항.

검사로부터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경우 판사는 원칙적으로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하고, 증인을 위한 보호조치로서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증인신문 시간은 증인의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하며,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증인신문 참여자에게 증인신문에 관한 준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송달하거나 교부,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하여 증거보전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영상물에 수록된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sup>86)</sup>

## 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구속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sup>87)</sup> 그러나 실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까지 통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통지하여 줄 것을 미리 요청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중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sup>88)</sup>

86) 성폭력처벌법 제4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7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 (재형 2013-2) 제3조, 제4조, 경찰수사규칙 제223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형사소송규칙 제91조, 제92조,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

87)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

88)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 3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결정

#### 가.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sup>89)</sup>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sup>90)</sup>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sup>91)</sup> 2020. 4.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피해자 대리인은 불송치 결정을 송달받은 즉시 신속하게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 담당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sup>92)</sup>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사는 아래 나.항에 따라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검사의 재수사요청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8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9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9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9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sup>93)</sup> 검사는 불송치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sup>94)</sup> 이 기간 동안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위법이나 부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sup>95)</sup> 한편 불송치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sup>96)</sup>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sup>97)</sup> 기존의 불송치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sup>98)</sup> 그러나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 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sup>99)</sup>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sup>100)</sup>

9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제1문.

9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제1문.

9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9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63조 제1항 단서.

97)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98) 수사준칙 제64조 제1항 제2호.

99)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100) 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단서.



## 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에 불복할 필요가 있을 때, 피해자의 대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sup>101)</sup> → 재정신청<sup>102)</sup> → 즉시항고<sup>103)</sup>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검찰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sup>104)</sup> 고소인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sup>105)</sup>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sup>106)</sup> 반면 고등검찰청검사장이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면 검찰 단계에서 불복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된 재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에 앞서 반드시 항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sup>107)</sup>

### 나.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101) 검찰청법 제10조.

102) 형사소송법 제260조.

10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104)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105)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106) 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10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sup>108)</sup>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sup>109)</sup>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sup>110)</sup>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sup>111)</sup>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sup>112)</sup>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sup>113)</sup>

한편,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sup>114)</sup>

## 다. 즉시항고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sup>115)</sup>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sup>116)</sup>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sup>117)</sup>

10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10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11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11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11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5항.

11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11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11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제1문 전단.

116) 형사소송법 제405조.

117) 형사소송법 제415조.

## 라.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소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sup>118)</sup>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재판절차진술권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인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sup>119)</sup>

한편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sup>120)</sup>

118) 헌법재판소 2010. 3. 2. 선고 2010헌마49 결정.

119)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20)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716 결정.



# 제5장

## 형사공판절차 지원



## 》 제5장

### 형사공판절차 지원

#### 1 개관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대리인은 기록 열람·등사,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진술, 증인신문 준비,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2 기록 열람·등사

##### 가. 근거규정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sup>121)</sup>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sup>122)</sup>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sup>123)</sup>

12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9조.

12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123)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

한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도 있습니다.<sup>124)</sup> 열람·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열람·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sup>125)</sup>

## 나. 열람·등사 범위

실무상으로는 피해자 변호사가 열람·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최소한의 소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경우 피해자에 앞서 이루어진 다른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정도에 한하여 피해자의 증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sup>126)</sup>

성범죄 재판실무편람에도, 피해자의 증언이 예정된 경우에, 피해자에 앞서 이루어진 다른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등사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 증언의 오염방지라는 일반적 법리를 근거로 피해자 증언이 실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무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도 피해자 변호사가 열람·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최소한의 소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 되는 경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sup>127)</sup>

그러나 일부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피해자 증언의 오염방지를 이유로 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공

124)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125)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126) 오승이·이주영, 피해자 변호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과제(2014), 젠더법연구회.

127) 박기쁨·유성희·지충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 및 피해자 보호(2020), 법원 젠더법연구회 재판 다시돌아보기팀.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하기도 합니다. 이는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조력권이 도입된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설령 피해자 증언의 오염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경우, 피해자에 앞서 이루어진 다른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등사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의 증언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만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선행 증인의 신문조서를 제외한 서류에 대해서는 우선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sup>128)</sup> 피해자 변호사는 법원에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위와 같은 점을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법원 형사과에 부록 1의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 공판기일 출석

#### 가. 근거 규정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sup>129)</sup> 대법원규칙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변호사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up>130)</sup>

128) 위 글.

129)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130)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

대법원규칙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신청의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sup>131)</sup> 공판절차 출석을 위하여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공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 변호사는 모든 공판절차에 별도의 신청이나 허가 없이 출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도 피해자 변호사는 모든 공판절차에 별도의 신청이나 허가 없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 나. 좌석배치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합니다.<sup>132)</sup>

## 4 의견의 진술

### 가. 형사소송법 규정

범죄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서 진술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sup>133)</sup>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sup>134)</sup>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131) 위 규칙 제6조.

132) 위 규칙 제5조.

133) 헌법 제27조 제5항.

134)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up>135)</sup> 또한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up>136)</sup>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인신청이 되지 않은 피해자가 재판부에 직접 양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 위 규정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성폭력처벌법상의 특례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sup>137)</sup> 의견 진술의 신청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신청은 구두나 서면에 의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의견 진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도의 의견 진술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할 수도 있고,<sup>138)</sup> 재판 진행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sup>139)</sup>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 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sup>140)</sup> 한편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sup>141)</sup>

135)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136)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137) 위 규칙 제6조 제1항.

138) 위 규칙 제7조.

139) 위 규칙 제8조 제1항.

140) 위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4항.

141) 위 규칙 제6조 제3항.

실무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구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판기일 외에는 법원에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된 경우 우선 피해자 대리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반대의견을 낼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는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이 정하는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sup>142)</sup>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42)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15. 선고 2015모2989 판결 참조).

한편 이에 관하여 21대 국회에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sup>143)</sup>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 5 증인신문 절차

### 가. 피해자가 아동 및 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혹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sup>144)</sup>

### 나. 비공개 재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sup>145)</sup> 또한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sup>146)</sup> 비공개 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에 미리 증인보호신청서[부록 2 참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43) 의안번호 210498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 24인

144)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 성폭력처벌법 제34조.

145)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1항.

146)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

## 다. 증인신문 시 피고인과의 분리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은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으로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sup>147)</sup>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비디오 증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은 예정하지 않고 있습니다.<sup>148)</sup> 이에 관하여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 라.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법원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sup>149)</sup>

## 마. 증인지원실 방문 및 증인보호신청서 제출

또한 각급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147) 성폭력처벌법 제23조.

148) 성폭력처벌법 제40조.

149) 성폭력처벌법 제3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3항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sup>150)</sup>

증인지원실에는 ‘증인보호신청서’[부록 2 참조]가 비치되어 있고, 신청서에는 재판의 비공개, 피고인과의 분리,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보호신청서는 증인출석 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증인신문 당일 증인지원실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증인신문 약 20~30분 전 피해자와 함께 증인지원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증인보호신청서 작성을 돕고, 작성 이후에 공판정에서 대기하다가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

### 가. 디지털 성착취물 증거조사의 문제점

형사소송법은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sup>151)</sup> 사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sup>152)</sup> 형사소송규칙은 녹음,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거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up>153)</sup>

이처럼 현행법은 디지털성착취물(전자매체에 저장된 사진 또는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때 공판절차에서 이를 재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판절차에서 성착취물을 제시

150) 성폭력처벌법 제32조 제1항 참조.

151) 형사소송법 제292조의 2 제1항.

152) 형사소송법 제292조의 3.

15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4 제3항.

하고 재생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 전문가 의견조회 요청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sup>154)</sup> 실무상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전문가의 요청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의견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154) 성폭력처벌법 제33조.



# 제6장

## 민사재판 지원



## 》 제6장

### 민사재판 지원

#### 1 소송 제기

##### 가. 민사소송 제기 시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유죄 판결을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형사상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낼 정도의 혐의 입증은 어렵지만 유의미한 선행 판례나 법리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 사건에 도움이 되는 증거 수집이 용이한 경우(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등 이용), 절차적 필요를 위해 형사소송 절차 종료 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형사상 유죄 입증의 어려움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소송 제기의 필요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나, 피해(가해)와 손해 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3항이 신설되어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인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sup>155)</sup>

155)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 판결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까닭에 성인인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응하지 못하였으나,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면서 심각한 심리불안을 경험한 끝에 가해자를 형사고소 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법원 하급심은 가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해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의 1심 판결 선고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제2항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해석한 뒤, 실제 성폭력 피해 시기와 성년이 된 후 가해자를 만나면서 시작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시기 사이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최초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때 그 관념적이고 부동적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sup>156)</sup>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가해자가 밝혀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판결의 법리를 유념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산점 판단 가능성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 고려

형사절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신원관리카드 작성과 더불어 가

156)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운동부 소속 선수였던 미성년 피해자가 운동 코치로부터 장기간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시간이 흘러 성년이 된 후 다시 가해자를 마주치면서 극심한 심리적 곤란을 겪으며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고, 비로소 형사 고소를 진행한 끝에 1심 형사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나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민법 제766조의 기산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명으로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일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sup>157)</sup>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채권자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피해자는 소송당사자인 원고로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연락처 등)를 기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sup>158)</sup>

## 다. 보전 처분의 필요성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미리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이라면 사실조회를 통해,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보된 이후에는 재산명시제나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에 이를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소송 중 해당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57)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11조 제4항, 성폭력처벌법 제23조 등 참조.

158) 2020. 11. 2. 박주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29호)은 법원이 소송서류 송달 시 피해자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과 동시에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의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개정안 제안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의안 원문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에 대한 기록으로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5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장 부분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제27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준비서면 부분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55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라. 청구액의 산정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및 불법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소송의 의미, 유사한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청구액이 커지면 인지대와 패소비용 등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청구금액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청구취지 확장 등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적절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산정 기준에 성범죄로 인한 피해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법원마다 청구인용 금액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위자료 산정은 보통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정 기준<sup>159)</sup>을 참고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장래에는 디지털 성범죄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의 지속성 및 확산성,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심대한 인격권 침해 등 구체적 사유들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159) 2016. 7. 20. 대전지방법원 주치 전국 민사법관포럼에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산정방안 초안이 발표된 뒤, 전국 5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위자료 연구반이 여러 검토를 통해 2017. 1. 발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절한 위자료 산정방안」,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의 설정 표(p. 4)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유형		기준 금액
교통사고		1억 원
대형재난사고		2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 원
명예훼손	일반 피해	5천만 원
	중대피해	1억 원

## 2 소송위임과 소송비용의 문제

### 가. 소송위임관계의 확정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는 별개이므로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활용이 가능하지 등을 별도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의 위임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혹은 유족) 또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직접 청구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 및 입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나. 소송비용 문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 보수) 마련에 있어 피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제도가나 민사소송법상 법원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변호사 단체의 공익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소송구조 등 무료법률지원과 관련한 정보는 매뉴얼 제3장과 제4장을 참고).

패소비용 부담도 피해자가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패소 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산정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이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3 소송수행 전략

원고는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의해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형사 판결이 있는 경우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사건 수사 기록 등을 받아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나 불리한 형사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적극적인 증거방법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조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영상이나 사진 재생 시청, 피해자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이나 증인신문 등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에 대하여 적절히 방어하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규칙 제98조는 증인신문과정에서 “법정 안에 있는 특정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그 사람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재판서·조서 등에 대한 열람 등 제한 신청(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 제한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7장

## 기타 사법지원



## 》 제7장

### 기타 사법지원

#### 1 피해자 보호 조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한 이후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시기의 제한 없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에 따라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sup>160)</sup> 신변안전조치로는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 내 보호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직장에 대한 주기적 순찰,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 있습니다.<sup>161)</sup>

신변안전조치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유선으로 신청한 뒤, 지체없이 신변보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sup>162)</sup>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보호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아가 범죄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위치확인장치 제공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검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sup>163)</sup>

160) 특정강력범죄법 제7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등.

16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등 참조.

16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63) 대검찰청 예규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참조.

## 2 언론 등에 의한 신원 및 사생활 누설 피해 구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은 수사 및 재판 등 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sup>164)</sup>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sup>165)</sup>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sup>166)</sup>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up>167)</sup>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그와 같은 보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경고하고, 기사를 즉시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sup>168)</sup> 위와 같은 피해에 대응할 때에는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내용을 기재할 때 간결하게 작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164)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165)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1호.

166)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167)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16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9조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 참조.

### 3 주민등록번호 변경

####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반복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특정 범죄피해자 중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sup>169)</sup>

범죄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sup>170)</sup> 피해자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변경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 →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의 변경결정청구 →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 및 의결 → ④ 구청장 등에 의결 결과 통지 → ⑤ 변경신청인에게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대리인 선임 통지서, 입

169)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 참조.

170)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증서류 등을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합니다.<sup>171)</sup> 이때 입증서류로는 경찰청 사건·사고 사실확인서와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sup>172)</sup>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sup>173)</sup> 결과를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변경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및 새 번호를 통지하여야 하는데,<sup>174)</sup> 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sup>175)</sup>

## 4 개명

### 가. 개명 개관

범죄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개명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실명이 유출된 경우에는 그 신원정보가 반복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위험이 있으므로 성명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

17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절차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rrncc.go.kr/>).

172)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173)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90일 이내로, 연장 가능기간을 30일 이내로 각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6호 참조.).

174)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3항.

175)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

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개명허가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나. 개명 절차

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 ② 법원의 개명허가결정 → ③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개명신고 → ④ 개명 완료

개명 절차는 크게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에 개명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sup>176)</sup>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및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 소명자료와 대리인 위임장 등을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sup>177)</sup> 가정법원은 개명허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합니다.<sup>178)</sup>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뒤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구청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sup>179)</sup>에 접속하여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sup>180)</sup> 개명신고를 할 때는 개명신고서와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신분

176)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177) 구체적인 개명절차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족관계등록비송 절차안내 참조([https://help.scourt.go.kr/nm/min\\_17/min\\_17\\_6](https://help.scourt.go.kr/nm/min_17/min_17_6)).

17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4항 및 제96조 제6항 참조.

179) <http://efamily.scourt.go.kr>

1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등 참조.

증명서를 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을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up>181)</sup>

---

1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제8장

## 유관기관



## 》 제8장

### 유관기관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가 있습니다.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삭제지원 단체 및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 현황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나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서 기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연계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 1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운영 기관

- 기관명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s://d4u.stop.or.kr/>
- 상담 연락처 : 02-735-8994
- 지원 내용 : 상담지원, 삭제지원, 의료지원 연계, 무료 법률지원 연계

- 기관명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s://gwff.kr/031cut/main.html>
- 상담 연락처 : 1544-9112
- 지원 내용 : 상담지원, 삭제지원, 의료지원 연계, 무료 법률지원 연계, 모니터링 지원, 안심지  
지 동반 서비스

- 기관명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 홈페이지 : <https://onestop5170.kr/>
- 상담 연락처 : 032-517-5170
- 지원 내용 : 상담지원, 삭제지원, 의료지원, 지지동행, 무료 법률지원 연계, 디지털성범죄 치유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산하로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경기도, 인천 시에서 디지털성범죄에 특화한 피해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삭제지원을 중심으로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삭제지원이 시급한 사례의 경우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 기관명 :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1366.or.kr/>
- 상담 연락처 : 041-1366

- 기관명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 홈페이지 : <https://www.svpcc.net/>
- 상담 연락처 : 063-236-0152

- 기관명 :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권역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 홈페이지 : <http://www.phwomen.org/web/>
- 상담 연락처 : 054-727-9595

- 기관명 :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 홈페이지 : <http://www.women1366.or.kr/main/main.php>
- 상담 연락처 : 055-1366

- 기관명 :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 홈페이지 : <http://www.dwhotline.or.kr/home>
- 상담 연락처 : 053-215-6487

- 기관명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 홈페이지 : <http://www.wopower.or.kr/>
- 상담 연락처 : 051-558-8832

- 기관명 :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 홈페이지 : <http://www.jejuywca.or.kr/>
- 상담 연락처 : 064-744-8994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전국에 7개 있습니다. 기존의 성폭력 상담소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상담과 삭제지원 및 연계지원, 무료법률지원, 의료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삭제지원이 협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특화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여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소별로 운영 중인 피해회복 프로그램과 수사동행 지원 등 여가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기관보다 세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단체 및 성폭력상담소

- 기관명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상담 연락처 : 02-817-7959
- 지원 내용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상담, 수사 법률지원, 심리정서 지원, 불안피해 모니터링 지원

- 기관명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상담 연락처 : 02-2275-2201
- 지원 내용 : 수사법률지원, 상담지원, 채증안내, 기관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위기 지원 및 방문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동행 지원

- 기관명 : 한국성폭력상담소
- 상담 연락처 : 02-338-5801
- 지원 내용 : 성폭력 피해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 기관명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상담 연락처 : 02-335-1858
- 지원 내용 : 성폭력 피해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 기관명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 상담 연락처 : 02-2263-6465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상담, 의료 및 법률상담 및 지원 연계(전국 약 20 여개 지부 존재, 쉼터 등 제공 가능)

- 기관명 : 십대여성인권센터
- 상담 연락처 : 02-6348-1318 / 010-8232-1319
- 지원 내용 :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상담, 법률/의료/심리지원 등 지원

- 기관명 : 여성인권센터 보다
- 상담 연락처 : 02-982-0922
- 지원 내용 : 성매매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의료비 지원, 학원비 등 직업훈련 지원, 쉼터 연계

- 기관명 :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 상담소
- 상담 연락처 : 02-3141-6191
- 지원 내용 : 상담지원, 법적지원, 의료지원

- 기관명 : 탁틴내일\_도담별
- 상담 연락처 : 카카오톡/트위터 dodamstar, 페이스북/인스타그램 dodamstar20
- 지원 내용 : 디지털성폭력·성착취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기관명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동
- 상담 연락처 : 02-924-1227 / 카카오톡: 땃동119
- 지원 내용 : 청소년 성소수자 지지 상담 및 위기지원(의료/법률/심리상담/쉼터 연계 등)

- 기관명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상담 연락처 : 02-733-0120
- 지원 내용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지원, 의료, 법률, 심리치료, 생활 지원, 통번역 지원

- 기관명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상담 연락처 : 02-3013-1367
- 지원 내용 : 위기개입과 상담, 심리적 지원, 의료지원, 법적 지원, 쉼터 연계

- 기관명 : 서울시 다시함께 상담센터
- 상담 연락처 : 02-814-3660
- 지원 내용 :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기관,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쉼터 제공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여성단체와 그밖에 다양한 여성폭력 전문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여성 등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전문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의 내용이 디지털 성범죄와 성매매, 가정폭력 등 다른 여성폭력과 중첩해서 발생했을 때 관련 전문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4 ▶ 해바라기센터 및 무료법률 지원 기관

### 가. 해바라기센터

- 연세의료원 : 02-3274-1375
- 경찰병원 : 02-3400-1700
- 보라매병원 : 02-870-1700
- 서울대학교 병원 : 02-3672-0365
- 삼육서울병원 : 02-3390-4145
- 국립중앙의료원 : 02-2266-8276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성폭력 지원과 동일하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수사 및 재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동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지원도 도움이 됩니다.

### 나. 무료법률 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무료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필요시 연계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번 양식]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피해자, 고소인, 증인 )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input type="checkbox"/> 복사대상 [ <input type="checkbox"/> 복사매수      매 ]				
사 용 용 도					
복 사 방 법	<input type="checkbox"/> 필사 <input type="checkbox"/> 변 호사단체복사기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복사설비 <input type="checkbox"/> 법원 복사기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신청인</span> <span>(서명 또는 날인)</span> </div>					
신청 수수료	500 원		(수 입 인 지 첩 부 란) * 열람실 뒤쪽 신한은행에서 인지를 구입하세요 (법원에서 인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복 사 비 용	원 (    매×50)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의 부과	20 . . .		재판장 판 사		㉠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 》 부록

### 2. 증인 지원 신청서

####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법원 제 형사부 귀중

사 건 : 20 고향(고단)

아래 각 절차 중 원하는 절차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절차 옆의 괄호 안에 ○ 또는 ✓ 등으로 표시한 뒤 증인신문 기일 이전에 미리 증인지원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미 증인지원관 또는 재판부에 전화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증인신문 당일 증인지원관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각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동봉된 「증인을 위한 안내」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각 절차의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시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 ○ 법 원 귀중

## - 아래 -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 ( )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장) ..... ( )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

※ 동석할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① 이름 :

② 증인과의 관계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기타( )

재판결과 통지

※ 아래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유무죄 여부 및 유죄 선고시 형량에 대한 간략한 통지 ..... (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용 (전화번호 : )

☐ 이메일 사용 (이메일 : )

2. 판결문 사본의 송부 ..... ( )

(송달받을 주소 : )

다만, 판결등본의 송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자 등은 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신청서와 민원  
 우편회송용 봉투를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부록

### 3. 사건 지원에 필요한 용어<sup>182)</sup>

#### 가. 유포 관련 용어

토렌트	수많은 이용자의 컴퓨터에 각각 분산된 파일을 부분적으로 모아서 다운로드하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가 다운로드임과 동시에 업로더가 됨. 유포죄로 인정 가능.
포르노 사이트	피해촬영물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통칭. 국내법의 적용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다. 게시판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 한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다른 사이트에도 동시 게시되는 기능 이용.
구글 드라이브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저장 장치. 현재 국내에서 불법사이트 단속이 강화된 후, 구글 드라이브(URL)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 심각.
자동폭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시글이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대화방을 없애는 경우에도 동일 표현 이용.
웹하드	이용자 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현금으로 결제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헤비 업로더	대량으로 파일을 업로드 하는 자. 웹하드의 경우 파일을 업로드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량 유통(유포) 하는 자 등 통칭.
다크웹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어 사이버 범죄(마약 거래, 성착취물 판매 등)에 활용.
공방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등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Project N’을 통해 확인된 공간, 제작·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던 ‘★공식링크, 정보공유방★’의 줄임말로 알려짐.

18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 피해 지원자를 위한 안내서」(2019)를 기본으로 하여 보완.

## 나. SNS 관련 용어

SNS 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각 SNS는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개별 대화매체(메신저). 문자나 카카오톡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실명을 노출없이 계정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대화.
트위터	SNS의 한 종류. 트위터 내에서 최근 소위 ‘#일탈계, #노출계’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게시하는 계정을 의미.
텀블러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SNS의 일종. 블로그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라인	카카오톡과 유사한 채팅 플랫폼으로 일본에 서버를 둬.
텔레그램	카카오톡과 유사한 채팅 플랫폼. 탈퇴하지 않는 이상 대화 내용, 파일 등이 계속 누적되어 저장된다. 비밀대화방 등 대화 내용을 자동삭제 기능 등이 범죄에 악용, 수사 곤란.
디스코드	음성채팅, 일반채팅, 화상통화 등을 지원하는 메신저. 주로 게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안 수단으로 활용.
랜덤채팅	익명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플랫폼. 일반적으로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
데이팅앱	틴더, 아만다 등 연애를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통칭. 익명성이 보장되고, 거짓 신상정보 이용 가능하여 범죄에 악용. 미성년자 가입에도 제한이 없어 문제.
일탈계, 살색계, 노출계	‘~계’는 트위터 등에서 ‘(관련된 글을 올리는)계정’을 의미한다. ‘일탈계’, ‘살색계’, ‘노출계’ 등을 해시태그로 달고 자신의 신체 사진을 업로드하는 계정. 제3자가 계정 탈취 후 비공개 사진을 유포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등의 성착취 범죄의 표적이 됨.
에스크	익명 질문 앱 서비스(asked.kr). 주로 청소년들이 지인과 익명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용도로 이용하나, 이를 통해 성적 모욕, 성매매 제안, 혹은 성폭력 신고 이후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 발생.
DM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의 쪽지 기능에 해당하는 ‘Direct Message’의 줄임말.
페메	페이스북의 쪽지 기능에 해당하는 ‘페이스북 메시지’의 줄임말.

## 다. 가해 행위 유형 관련 용어

사이버 불링	사이버 공간에서 SNS 등을 이용해 특정 대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집단적으로 욕설·폭언을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이버 불링’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함.
온라인 그루밍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 및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신체촬영물 전송, 오프라인에서의 조건만남 등 성적 목적의 제안을 하는 행위. 성적 제의가 반드시 직접 만남으로 이어질 필요 없음.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근거 규정이 마련.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포감·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
저격영상	누군가를 특정하여 혹은 애매하게 특정한 채로 공격하는 영상. 사이버 불링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패드립	‘패륜’과 ‘애드리브’의 합성어로, 상대방의 부모님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말 혹은 행위.
지인능욕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에 합성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성적인 모욕을 함께 유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합성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사진에 자위를 하거나 정액을 묻히는 등 다양한 양태로 범행. 직접 합성, 제3자에게 합성 의뢰 후 유포 등 유포 피해로도 연결.
딥페이크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합성/변조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혹은 이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영상.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가짜 포르노’를 만들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보복·협박할 목적으로 교제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또는 유포된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을 유포하는 것과 동의 하에 촬영되었지만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을 모두 포함. 피해자에게 상처를 받아 이에 대한 복수의 차원이라는 ‘리벤지’ 이러한 촬영물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음란물이 될 수 있다는 ‘포르노’라는 말 대신 ‘불법촬영물’, ‘불법유포물’ 혹은 ‘비동의 성적 영상’ ‘이미지 기반 학대’ 등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

로맨스 스캠	로맨스와 스캠(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무역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의 합성어.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한 뒤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
몸캠 피싱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적 내용의 화상 채팅(몸캠피싱)을 하라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성적 행위, 성적 이미지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해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악성코드	제작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든 악의적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종류가 있다. 이중 트로이목마는 공격자가 컴퓨터에 침투해서 사용자의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유의어 : 맬웨어, 악성 프로그램.
스파이웨어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뜻하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몰래 숨어들어 있다가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가는 프로그램을 지칭.
원격 조작 (원격 제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기기를 활용하여 특정 기계 장치를 동작시키거나 조종하는 일. 원격제어가 가능하게끔 하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은 악성코드처럼 애초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아니나,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의 기기를 원격 조종함으로써 사진, 계정정보, 금융범죄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악의적으로 활용.
계정 탈취	‘일탈계’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당신의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 “당신의 신상정보가 퍼져 있는 것 같다” 등 불안감을 조성한 뒤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빼가는 범죄. DM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고 피해자가 계정 로그인을 시도하면 계정정보 및 휴대전화의 개인 연락처 등이 탈취되는 ‘피싱’ 유형, 피해자로부터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유형 등.
비공개 촬영회	실내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운영자의 주도 하에 섭외된 여성모델과 참가비를 지불한 남성들이 누드촬영회를 열고 촬영을 하는 것. 비공개촬영회에 참여했던 모델들의 촬영물이 대량 유포되면서 광범위한 비동의 유포 피해를 입었고, 촬영진행 중 일어난 성폭력 사건 등도 문제가 되었음.

## 라. 디지털 정보 증거 관련 용어

디지털 포렌식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인터넷 접속기록 등에 관한 네트워크 포렌식, 삭제 저장된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로 사용 가능한 분석 결과.
DNA필터링	음악 또는 동영상 파일에서 해당 파일만의 고유 특성을 추출하여 필터링 하는 기술을 말한다.
마그넷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파일이 있는 웹상 위치를 알려주는 인터넷 주소이며 토렌트와 결합하여 있다.
해시값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이라 표현.
IP주소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기기에 할당되는 번호. 번호 자체가 고정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변경 가능. IP주소에 연결된 네트워크 주소가 포함 되기 때문에 IP주소를 알면 대략적인 사용자 위치 파악 가능.
MAC 주소	네트워크 연결과 관계 없이 기기에 내장된 무선 네트워크 칩에 할당된 주소. IP주소와 달리 기기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관련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한 고정.



## 마. 기타

가상화폐, 암호화폐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므로 성착취물 거래 등에 이용되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등으로 수색망을 좁힌 사례도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네로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의 거래소를 통해 거래.
비트코인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 주로 성인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문상	문화상품권의 줄임말. 계좌나 신용정보 추적을 피하고자 성착취 영상을 판매하는 대화방에 대한 입장료 등으로 이용.
골뱅이	심신미약 상태의 여성을 지칭하는 말. 사이버 성폭력 피해촬영물에 해당 단어가 붙었을 때 심신미약 상태의 여성을 강간하는 영상임을 암시.
국산	국내에서 만들어진 성착취물라는 뜻으로 불법 촬영물임을 암시.
벗방	인터넷 1인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BJ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 통칭.
직촬, 직찍	‘직접 촬영했다(찍었다)’는 의미로, 게시자가 다른 곳에서 퍼오거나 받지 않고, 직접 촬영한 콘텐츠를 말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성매매 업소 종사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올라온 곳의 이름도 ‘직촬방’이다.
엔번방(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통칭.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성착취물 판매 대화방명에서 비롯되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

<b>발행일</b>	2021년 10월
<b>발행인</b>	회장 김 정 욱
<b>발행처</b>	서울지방변호사회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변호사회관)
<b>전 화</b>	02) 6200-6200
<b>홈페이지</b>	<a href="https://www.seoulbar.or.kr">https://www.seoulbar.or.kr</a>
<b>인쇄처</b>	경성문화사 (02-786-2999)

\* 비매품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법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